

‘여야의정 협의체’ 반쪽 출범... 의료계 “의대 정원 우려”

야당·전공의 단체 불참... 협의체, 연말까지 성과 목표

의료 개혁 과제와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가동됐지만 전공의 단체와 야당은 불참했다.

협의체는 오는 12월 말까지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주 2회 회의를 열고, 의료계 요청 사항인 사직 전공의 복귀 및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협의체의 여당 측 대표자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의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협의체가 12월 말까지 기한을 두고 운용한다”면서 “가능한 12월 22일, 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첫 회의의 결과와 관련해 “대화의 첫걸음을 시작한 데에 의미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 당이 허심탄회하게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료계는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합격해도 (남성의 경우) 3월에 (군에) 입대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며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돕기 위해 진지하고 다양하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이와 함께 의평원의 자율성 보장을 요

구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해서 협의체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협의체는 다음 달 말까지 매주 두 차례 회의(일요일 전체회의 1회, 주중 소위원회 1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논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날 협의체 첫 회의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에서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이 참석했다.

전공의 단체와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의료계 측 대표자들은 이날 의대 정지 선발을 앞두고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지아 의원은 “2025년,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의제에 제한이 없다는 원론적인 부분은 이야기했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한 의원은 “전공의 복귀를 위해 명분이 필요한데, 어떤 명분을 도출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

일시 | 2024. 11. 11.(월) 08:00 장소 | 국회 본관 245호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1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이종태 KAMC 이사장. /연합뉴스

野 “R&D 예산 늘었지만 기존 감액 그대로”

예결위 공방...與 “미래분야 집중” vs 野 “원자력 편중”

여야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연구·개발(R&D) 예산 항목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정부·여당은 R&D 예산 편성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꼭 필요한 미래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위한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 원칙을 어긋나고 예산 편성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내년 과학기술 분야 예산이 약 11% 늘었지만, 자세히 보니 여전히 지난해 대규모 감액된 부분은 그대로이고 SMR(소형 모듈원자로) 등 원자력 관련 분야만 대폭 증액됐다”며 “특정 분야에만 편중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R&D 예산은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어나는 데 3년 정도 소요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는 것을 줄였기 때문에 올해는 늘어난 것이고, 이를 정비하는 과정”이라며 반박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증액된 예산이 SMR 등에 편중됐다는 것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3대 계층체인지 기술(인공지능·양자·바이오), 예비타당성조

사, 일몰제 폐지 등도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작년 6월 대통령이 나눠 먹기식 R&D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말쑈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두세 달 만에 4.6조원이 대폭 삭감됐는데, 올해 50% 이상 감액된 사업 221개 중에 내년도에 증액하거나 예년 수준 이상으로 복원되는 사업이 487개나 된다”면서 “줄속 예산 편성”이라고도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AI 인프라 투자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터인데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국내에 짓지 않고 한국을 패상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안정적인 전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한다”며 정부의 SMR 분야 투자 기조를 뒷받침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SMR 예산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다. 감액할 경우 어떤 일이 생기나”라고 물었고, 최상목 부총리는 “앞으로 SMR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과다하게 활용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산업적으로 활용성이 있기 때문에 2028년에 상용화를 시켜서 표준설계가 완성되면 늦지 않도록 활용할 예정”이라며 “지금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0.7GW짜리 한 기가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 줄이고 제3자 특검 추천권”

민주, 수정안 제출키로...국힘 반대 명분 없애 참여 유도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삼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로부터 촉발된 ‘명태균 게이트’,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선거 개입 의혹에 국한한 특검법 수정안을 오는 14일 본회의에 내겠다”며 “제삼자의 (특검) 추천(요구) 수용해 이 방식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달 17일 발의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13개와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 지된 관련 사건이다.

한 대변인은 “선거 개입 의혹이 있는 명태균 게이트를 밝히고 국민의 요구인 김건희 특검을 관철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출했다”며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대표, 대통령실이 반대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또 명태균 씨가 지난해에도 대통령 부부와 연락

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사과하고 노력하겠다는 대통령이 거짓말과 국민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거짓말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한 수사가 정당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연다. 민주당 17개 시도 당도 지역별로 서명운동본부를 출범하고 천만인 서명운동에 나섰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힘 “당정 하나로 4대 개혁 추진”

尹 정부 후반기 운영 방침 밝혀

국민의힘은 11일 윤석열 정부의 임기 후반기 시 작과 관련해 “당정 하나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반 동안의 국정 운영에 대해 “역대 정부가 쉽게 나서지 못했던 4대 개혁을 추진하고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 맞춤

형 약자 복지를 강화했고 양극적 탈원전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바로잡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관계를 복원했다”고 평가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렇지만 여전히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하고 민생 경제회복이 지연되는 등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당정이 하나 돼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겠다”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민생을 지키고 안보를 튼튼히 하며 미래를 키우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임기의 반을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에서 지난 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께서 국민께 약속한 사안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며 “그래야 국민이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운 정부의 남은 임기 반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국민께 드린 약속들은 지금 상황에서 민심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라며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조차 망설인다면 민심은 우리에게서 완전히 멀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MD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창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